Ⅳ. IMF 시대를 넘는 지혜

1. 이제는 산업구조조정을 생각해야

□ 기업구조조정이 끝이 아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급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되어 청산, 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극심한 내수 위축과 고금리 및 금융시스템의 기능 부진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근로자들의 고용 조정에 나서고 있다.

구조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준다.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 평생을 바쳐 키워온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녹슬어가는 기계를 지켜보아야 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말못할 슬픔과 고통이 모두 구조조정의 비용이다. 이렇듯 구조조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호황기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으면서도 미리미리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대가로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이다.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진행중인 부실기업 정리, 한계기업의 몰락, 잉여 인력의 정리 등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은 곪은 상처를 제거하는 구조조정의 제1단계일 뿐이다. 곪은 부위를 도려냈다고 바로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처가 다시 곪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소독 처치도 해야 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도 필요하다. 때로는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산업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즉 체질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산업구조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부실기업 누적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실기업들을 정리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실기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다시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아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적절한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또 수출 경쟁력을 높여 외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산업구조조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유망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른바 산업간 구조조정이다. 즉 우리 경제가 이미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의 자원(자본, 인력 등)을 새로운 유망산업에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추진중인 사업구조 재구축은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산업간 구조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와 같이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industrial targeting)은 WTO 시대에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유망산업 선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地代를 발생시켜 과잉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유망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인력이 유인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유망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진입 규제를 철폐하고, 신규 유망산업에 유능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 물론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중요하고 또 정부 부문이 관련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요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는 기존 산업이나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즉 산업내 구조조정이다.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디자인이나 신기술의 채용, 새로운 제조공정의 도입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산업내 구조조정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실업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컨대 의류봉제업에 종사하던 실직자들이 약간의 재훈련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규 유망산업의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주로 새로이 배출되는 신규 노동력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경기 불황에 의한 단기적 실업이 아닌 구조적

실업이다. 이 경우 고용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실업 대책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직자에게는 체계적인 재훈련을 통해 유관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는 숙련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하고, 산업내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이들 기존 업종의 고용 흡수력을 키워주는 것이 실업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셋째는 산업 발전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이 뒤지고 핵심 부품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해외에 유출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여 왔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부품 중소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창 달아오르는 듯하던 벤처기업 육성 논의가 최근 들어 급속하게 가라앉고 있다. 아마도 벤처비지니스 육성을 기존 대기업 위주 성장 모델의 대안으로서 기대했다가,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벤처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기대감이 수그러든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대안적 성장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높으면 벤처를 육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벤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벤처비지니스를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과도한 정부 지원은 '온상 체질'을 길러 벤처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에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규제는 벤처의 생명력인 창의성을 말살하게 될 것이다. 만약 '대안적 성장 모델로서의 벤처'를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잉 보호 못지 않게 무관심도 잘못된 것이다.

물론 벤처는 기존의 성장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일 수가 없다. 하지만 벤처는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돌게 하고 새 살이 돋게 하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강점과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지는 벤처와 대기업이 때로 경쟁하고 때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자극할 때 우리 산업의 기초 체질은 한 단계 강해질 수 있다. 특히 신규 유망산업이 또 다시 기초 체력이 부실한 과잉투자 업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의 모험정신과 유연성을 충분히 북돋우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 견 *kkim@hri.co.kr* ☎ *724-4043*)